



3면

"간호법 공포하라" ... 예비간호사들도 성명

# 전주매일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음 3월 27일) 제326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결정 즉각 철회하라”

도의회, 김만기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만장일치 가결  
“조사·분석·검증 권한 없는 시찰단 파견, 요식행위”  
정부에 파견 협의 중단·실질적인 방안 마련 촉구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및 오염수 조사·분석·검증 권한 없는 시찰단 파견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15일 제4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만기 의원(환경복지위·고창2)이 대표로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건의안은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정부는 실질적 조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시찰단 파견 일정과 항목 등을 포함한 실무 협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으로 현장확인하고 함께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의미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일본은 한국 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은 상황이다. 애초에 우리 시찰단의 임무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나 검증 또는 조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김만기 의원은 “우리 시찰단이 일본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돌아오는 견학에 불과한 요식행위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오염수 안전성 객관적 검증 과정에 조사·분석·검증 권한 없는 시찰단 파견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로, 오히려 일본에 변치부(변치부)를 주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 스스로가 마치 오염수 안전성 객관적 검증 과정에 조사·분석·검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금이라도 시찰단 파견을 중단하고, 오염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한국 시찰단의 활동이 '자료 채취' 등 자체 검증이 아닌 오염수 정화시설과 방류 전체 과정을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재훈 기자



15일 광주광역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김관영 도지사(사진 가운데)와 강기정 광주시장 일행이 민주열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민주주의·정의 가치 발전시킬 것”

김관영 도지사, 5·18 민주화운동 열사 참배  
전북출신 이세종·김군수 열사 묘역 찾아 추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15일 김관영 도지사는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광주광역시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영면한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5·18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일행이 함께 했다.  
이들은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탑 앞에서 헌화 분향 및 묵념을 하고 5·18 최초 희생자인 전북 출신 이세종 열사와 임군수 열사 등의 묘역을 참배했으며, 이후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5·18구묘역)으로 이동해 민주영령을 추모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흘렸던 피와 눈물을 가슴에 새기며 민주주의와 정의의 역사를 수호하고 계승 발전시킬 것이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43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전역에 흐르고 있고 5월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민주와 정의의 시대를 열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도내에서도 기념식 및 추모식, 학술제,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특자도 전부개정안 10대 특례 추진논리 강화

농생명산업 육성·이민 권한 광역 이양·신재생에너지 등  
전북연구원, 19일까지 릴레이세미나 열고 분과별 발제·토론

전북연구원은 15일부터 1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릴레이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10대 특례와 관련된 전북연구원 연구진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릴레이세미나는 10대 특례인 △농생명산업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새민족의 생명경제 거점화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중 등 지원, △자동차 대체부품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주산에게 이익이 돌아가

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수소산업 육성, △K-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고령친화·사회서비스 산업 단지 조성에 맞춰 각 분과별로 연다.  
15일에는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특례에 대해 류하늬 교수(한양대)의 '제주도 재생에너지 공공적 자원관리 특례사례' 발제와 함께 김영권 단장(전북IP에너지사업육성단), 김길훈 교수(제주대), 박재필 교수(군산대) 등 전문가 토론을 이어갔으며,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해 김재

경 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수소거래소 설립과 운영 필요성' 발제와 송민호 정책관(완주군), 김필규 책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모영환 전문위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 토론도 이뤄졌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요 특례의 부처 수용성을 강화시켜 전북경제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주요 특례별 전북의 특성성과 연계된 필요성 및 추진논리를 강화시키고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도, 내달 2일까지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특별점검

재해 예방·산림환경 보전 위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15일부터 6월 2일까지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무분별한 산림 난

개발 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속에서 건강 산림생태계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산림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 변경 및 컨테이너·공작물·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복구명령 등)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훼손된 산림자가 조속히 산림복원이 추진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